

사직공원 조성과 사직단을 둘러싼 ‘개발’과 ‘문화재보호’ 담론의 대립*

-일제시기부터 1960년대를 중심으로-

김 수 자**

목 차

- I. 머리말
- II. 일제시기 사직단의 기능 상실과 공원으로의 조성
- III. 해방 이후 사직공원내 다양한 건축물의 조성
- IV. 서울시 도시계획과 사직단을 둘러싼 ‘개발’과 ‘문화재보호’ 담론의 충돌
- V. 맺음말

국문초록 | 사직단 및 사직공원은 해방 이후에도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문화유적 중 하나이다. 일제시기 사직단의 훼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사직단의 기능을 정지시킨 것 외에도 사단과 직단, 두 단만 남기고 나머지 시설물들을 철거, 원형을 거의 찾을 수 없게 만든 것, 그리고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신성시되었던 제의공간을 위락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사직단의 원형을 일제가 빼앗기고, 해방된 이후에도 6.25 전쟁 등 시대 상황의 급변 등으로 방치된 채 복원되지 못하였다. 특히 1960년대는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에 밀려 사직단의 중심 요소들이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5788)

** 金壽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부교수

투고일: 2020. 5. 13. 심사완료일: 2020. 6. 9. 게재확정일: 2020. 6. 14.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0.38..137>

더욱 축소되거나 변형되었다. 사직정문은 도로건설계획에 의거,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운행을 위해 이전되면서 사직단으로 들어가는 ‘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직단 복원 관련 논의들은 현재뿐 아니라 해방 이후 1960년대의 ‘개발’과 ‘문화재 보호’ 담론의 대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제시기 변형된 공간들의 복원 및 정체성 확립을 둘러싼 담론의 고찰은 탈식민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

사직공원 및 사직단의 정체성 회복을 둘러싼 논의들은 큰 틀에서 ‘민족’ 담론과 ‘개발’ 담론의 대립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 식민시기를 거치면서 왜곡, 변형된 상징공간의 정체성 회복 과정의 지난함을 살펴보는 데도 유용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사직단, 사직공원, 상징공간, 개발 담론, 문화재보호 담론

I. 머리말

일제는 한국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근대 문명화 전략’을 취하였으며 그 전략 중 하나가 근대공원의 조성이었다. 일제는 서울의 인구가 증가하자 ‘도시의 보건 위생적 차원’을 강조하며 오락공간이자 휴식공간의 역할을 담당할 공원을 만들어 근대문화의 전파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일제 식민권력에 의해 조성된 공원은 조선을 상징하는 공간들이었다. 조선 정치 및 왕실의 거주공간인 창경궁,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을 모신 장충단, 농업국가인 조선의 안녕을 기원하며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던 사직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조선시대 ‘국가’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직단은 1911년 사직대체가 폐지되고, 1921년 경성부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상적’ 측면뿐 아니라 ‘고유의’ 정체성이 거의 상실되었다.¹⁾ 일제시기 그 ‘고유한’ 역할

1) 사직공원은 사직공원, 사직근린공원, 사직단공원으로 불렸다. 1940년 조선총독부는 사직단공원을 공식적인 명칭으로 하였으며, 1977년 서울시는 사직단 권역의 공원을

없이 사적(史蹟)으로, 공원의 ‘부속 공간’의 하나로 전락한 사직단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일제에 의해 왜곡, 변형된 것이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적 중 하나이다. 특히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왜곡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의 고궁과 종묘가 탈식민의 논의와 함께 원래의 모습과 그 정체성을 점차 복원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사직단은 사직대체가 부활하였으나 그 행사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조선 시대 사직단을 위해 조성된 권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종로도서관, 단군성전, 황학정 등 성격이 다른 복합적인 시설물들과 섞여 있다. 현재 사직단은 사직공원 내의 시설물 중 하나로 관리되고 있으며, 훼손, 변형된 공간의 일부는 복원 중에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복원의 방향성과 관련된 ‘논의’ 들이 진행 중이다.

일제의 사직단 훼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사직단의 역할과 기능을 정지시킨 것 외에도 사단과 직단, 두 단만 남기고 나머지 시설물들을 철거하여 그 원형을 거의 찾을 수 없게 만든 것이었다. 사직단의 원형은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된 이후에도 제 모습을 찾지 못하였다. 1960년대에는 서울시의 도시 계획에 따른 ‘개발’ 논리에 밀려 사직단의 중심 요소들은 더욱 축소되거나 변형되었다.

사직단 및 사직공원의 정체성 회복 및 복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제기된 것은 1980년대 중반,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국제 올림픽대회의 서울 개최가 확정되면서부터였다. 1985년 사직단은 단을 둘러싼 담장이 복구되면서 ‘최소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²⁾ 그러나 2020년 현재까지도 사직단 복원계획은 사단과 직단 중심이며 관련 건축물과 공원을 포함하는

사직근린공원이라 불렀으며, 현재 공식 명칭은 사직공원이다. 본고는 현재 통칭되고 있는 사직공원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연혁 2016』, 2016.

2) 사직단 권역의 복원 노력은 1985년 『서울사직단 고증조사 및 복원보고서』가 발간되면서 적극적으로 공원 내외부 정비와 일부 건물에 대한 복원 논의가 진행되었다.

권역으로의 확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직단’ 권역의 복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복원을 둘러싸고 다양한 담론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담론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직단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주변을 재정비하여 ‘역사공간’으로 복원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시설물들을 정리하고 사직단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반대,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다.³⁾ 이러한 사직단 및 사직공원의 정체성 복원 관련 논의는 전통문화, 민족문화라는 측면에서의 ‘역사적 가치’와 현재의 교육 문화 편의시설과 관련된 측면의 ‘현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⁴⁾ 그러나 사직단 복원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논란의 출발이 ‘일제가 사직단 권역의 공간을 변형시키고 왜곡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사직단의 정체성 회복을 둘러싼 논의들은 큰 틀에서의 현재의 공공시설물 이용과 관련된 ‘공공성’ 담론과 ‘문화재보호’ 담론의 대립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3) 현재 사직단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동쪽의 안향청 공간과 서쪽의 전사청 공간을 중단기적 계획을 수립 복원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직단 복원은 현재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직단 복원과 관련하여 일제 잔재청산, 민족 자존감 및 역사성 회복을 위하여 복원 정비 추진 사업에 적극 찬성이지만 어린이도서관, 종로도서관, 매동초등학교 등을 철거하고 복원하는 것에는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 시설들은 이미 종로 주민의 교육, 문화공간으로 현대사적 의미가 크므로 사직단 복원을 위해 이들 건물들의 철거에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차 주민공청회』, 2014. 10. 22; 『제2차 주민공청회』, 2014. 11. 26. 문화재청, 『사직단 복원정비계획』, 2014, 12.

4) 사직단의 현대적 재해석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사직단 본래 기능에 충실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민과 연계 가능한 활용방안 마련의 필요를 제기하는 의견 등이 있다. 문화재청, 『사직단 복원정비계획』, 2014, 12.

상징 공간의 정체성 회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의 문제, 즉 탈식민의 문제와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일제시기 사직단의 공원 조성 과정에서 사직단 권역이 어떻게 왜곡, 변형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해방과 전쟁 이후, 1960년대의 서울의 도시개발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사직단과 문화재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던 '개발 및 근대화'담론과 그 대척점에 있었던 '문화재보호'담론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미 등을 또한 살펴볼 것이다.⁵⁾

일제시기 사직단 및 사직공원 조성과 관련된 연구는 경성부의 경성시까지 계획과 함께 어느정도 진척되어 있다.⁶⁾ 그러나 해방 이후의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일제시기 사직공원 연구 성과를 참고하며 해방이후와 1960년대 사직단을 둘러싼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일제시기부터 1960년대까지를 연구 시기로 설정하였으며 이것은 사직단 정체성의 변형에 따른 시대적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기 위함이다.

-
- 5) 사직단 복원은 현재까지도 '민족정기 회복', '일제 식민청산', '역사바로세우기', '식민 시기의 문화도 역사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 다른 삶의 역사', '오늘도 역사다' 등을 축으로 하는 민족담론과 공공성담론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직단 복원 작업에 활기를 띠며 제기되던 시점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였다. 「사직단 역사성 회복 포럼」, 2003; 예울, 『사직단, 이대로 좋은가- 사직단 복원과 활용을 위한 제안』, 2013.
- 6) 문화재청, 『사직단 복원 정비계획』, 2014, 12, 3쪽; 전봉희, 박일향, 「20세기 사직단 영역의 토지이용 변화와 역사적 제도주의적 해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0, 2014; 김서린, 김해경, 박미현, 「근대 사직공원의 형성과 변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 2014; 한지명, 「일제강점기 사직단의 공간구성변화-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사직단 공원계획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II. 일제시기 사직단의 기능 상실과 공원으로의 조성

종묘와 사직은 전근대사회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들의 도시 공간 구성에 중요한 요소였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후 수도 한양을 건설하면서 『주례』의 좌묘우사(左廟右社) 원칙에 따라 법궁(法宮)인 경복궁의 오른쪽에 사직단을 조성하였고, 왼쪽에 종묘를 건립하였다. 조선시대 종묘, 사직은 신성한 제의 공간으로 종묘가 왕실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었다면 사직단은 국가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곳이었다. 특히 사직단은 농경사회를 지탱하던 국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였다.

사직단의 기본적인 공간 구성은 토지의 신을 위한 제단, 곡식의 신을 위한 제단 그리고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인 유(墪), 동서남북으로 있는 네 개의 문, 다시 문을 둘러싸고 있는 담인 원(垣), 원의 동쪽과 서쪽에 제사를 위한 부속 건물들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가장 바깥에서 경계를 나누고 있는 담장인 장(牆), 사직단 대문, 그리고 사직단을 ‘바깥’ 세계와 구분, 신성성을 더하기 위해 숲을 조성하여 권역을 이루었다.⁷⁾

대한제국 시기까지 통치권자들은 국가 안위가 위태롭다고 판단하면 사직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성을 다하여 국가 안위를 기원하는 사직대제를 올렸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사직단의 기능과 역할은 사라졌다. 가장 큰 이유는 1911년 조선총독부가 ‘제사 폐지에 관한 훈령’과 ‘사직단 폐지에 관한 훈령’을 공포하여 공식적으로 사직대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이

7) 현재 사직단은 사적 121호이며 단유와 안향청, 사직대문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사직대문은 도로계획에 의해 여러 차례 옮겨졌다. 제사를 위한 여러 부속건물들은 사라졌고, 사직단의 성격과 맞지 않는 시설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사직동주민센터, 사직파출소,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서울시립종로도서관, 매동초등학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단군성전, 황학정 등이다. 한지명, 「일제강점기 사직단의 공간구성변화-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사직단공원계획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쪽.

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안위를 기원할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직대제 등 제례가 폐지되면서 사직단은 그 ‘기능’을 잃었다. 제례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조성되었던 전시청, 악기고, 제기고 등의 건물들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 철거되어 흔적이 없어졌다. 총독부는 대한제국이 관리하던 환구단과 사직단의 시설과 부지를 인계하였다.⁹⁾

1921년 경성부(京城府)는 경성부 도시계획의 하나로 장충단, 훈련원, 효창원, 사직단의 공원 조성 사업을 발표하였다. 경성부는 공원 조성 이유에 대해 “서울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팽창함으로 사회, 문화적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¹⁰⁾ 그리고 경성부는 1922년의 주요사업으로 서울의 확장에 따른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의 개발은 외형적 도시 미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보호, 생존의 안위가 요구되는 것’이 오늘날 전세계 도시들의 추세임을 강조하며 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시민의 피로를 풀어주고 도시 위생을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는 경성부의 공원 조성의 논리는 서구의 공원의 공공성과 외형상으로는 ‘동일’ 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성부가 공원 신설 예정지로 언급한 곳은 사직단, 효창원, 훈련원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국가 안녕’을 기원하던 제의공간의 역할을 하던 그리고 ‘국가 안위’를 담당하던 군인들의 훈련장이었던 대한제국의 안위와 관련된 상징적 공간이었다. 일제의 공원조성은 기존의 상징성을 완전히 훼손시키며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서구의 근대공원의 성격과는 다른 것이었다.

경성부의 1921년 사직단의 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총독부로부터 사직단 주변의 토지를 차입하여 사직단을 없애고, 운동장이나 서울

8)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 「사직단 제사 폐지훈령의 건」, 『社寺宗教』 363호, 1911. 2. 14.

9) 『순종실록』 부록 권2, 순종4년 2월 20일.

10) 조경비평 봄, 『공원을 읽다: 도시공원을 바라보는 열두 가지 시선들』, 나무도시, 2010.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서울 북부에 ‘완전한’ 공원을 만들 계획하에 2만여 평의 사직단 일원을 중심으로 부근의 산들을 합하여 72,600여 평의 대공원을 건설하고자 필운동, 누상동, 사직동 일부의 임야 52,000여 평의 대부원(貸付願)을 총독부에 제출, 15년 동안 무료로 대부한다”는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포함한 것이었다.¹¹⁾ 다른 한편으로 공원 조성에 좋은 자연적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곳은 원래부터 수목이 무성하여 천연의 경치가 훌륭한 까닭에 별로 수목을 심을 필요가 없고, 어떠한 곳은 도리어 울밀한 수목의 간벌을 할 곳도 있으므로 경치를 도입하는 데는 경비가 별로 들지 아니하나...¹²⁾

이와같이 경성부는 사직단 권역의 좋은 환경적 조건외에도 경제적 측면의 유리한 점을 부각하며 공원 조성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경성부의 사직단의 공원 조성이 발표되자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 『동아일보』의 ‘횡설수설’란에는 “운동장도 긴요치 아니함은 아니나 하필 사직단의 구지(舊地)를 파괴하여서 만들려는 의사는 알 수 없다”라거나, “사직단을 보호하고 운동장은 별도의 다른 곳에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¹³⁾ 이러한 기사들은 사직단을 포함하여 경성부가 발표한 효창원, 훈련원 등의 공원부지가 조선 시대부터 토지신이나 곡식의 신 또는 순국선열을 제사 지내고 기리는, 신성시되던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한다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즉 경성부가 이곳에 공원을 건립하는 것은 이들 지역에 대한 훼손 나아가 역사적 상징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였던 것이다.

경성부의 사직단의 공원 조성에 대해 총독부는 “사직단 공원의 일부를

11) 「사직단 공원 확대」, 『동아일보』, 1923. 2. 11.

12) 「토목부장 자문안, 경성부소재 사직단 부지 건물을 공원지로 양여하는 건」,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22. 5. 22.

13) 「횡설수설」, 『동아일보』, 1921. 11. 29.

변경하는 선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다음의 조건하에 공원 설계에 있어서 일부 변경을 요한다. 구 사직단은 원형의 보존은 물론 해당 단 내외 주변 사직단 석원(石垣)과 석계(石階) 등의 파손된 것은 수복한다. 사직단의 기지는 원형 그대로 둔다..... 구사직단은 앞의 각 항목에 맞게 보존하고 자유롭게 내부에는 통행 관람을 허가하고 운동장과 운동 기계를 내부에서 설치한다. 사직단 부속 목조건축물은 취훼(取毀)함에 지장이 없다.¹⁴⁾

총독부의 허가로 경성부는 최종적으로 최초 설계 내용을 변경, 공원 조성에 착수하였다.

사직단은 경성의 고대 건물로 유명한 역사를 가진 고적 즉, 지금 사람들의 운동을 위하여 운동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거나 유명한 고적의 부근을 개척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직단은 그대로 보존하고 운동장은 사직단 앞 남쪽에 설치하고 경기장은 따로 설치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장의 넓이를 크게 하여 경기장과 운동장으로 겸하여 사용하도록 설비할 것...”¹⁵⁾

이와같이 사직단 권역이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사직단은 고적으로 취급되어 유지되거나 공원 안의 하나의 부분이 되었으며 주위에 운동장과 같은 대규모의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다.¹⁶⁾ 그러나 실제로 공원 조성은 주변 도로의 확충 등 새로운 시설 설비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려워 공사는 지연되고 설계가 변경되기 일쑤였다.¹⁷⁾ 초기 사직단 및 부속건물들을 그대로 두고

14) 「고적조사과장 의견서, 경성부 소재 사직단 부지 건물을 공원지로 양여하는 건」,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22년 5월 12일.

15) 「사직단 원형보존」, 『동아일보』, 1922. 10. 21.

16) 「신설할 3곳의 공원」, 『동아일보』, 1921. 12. 26.

공원을 조성하고자 한 계획은 사직단을 중앙에 형체만 남겨두고 그 주위로 운동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은 학교나 단체에서 이곳을 운동회 개최 등의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것과 이를 위해 편의 시설 등을 설비할 수 있도록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였다.¹⁷⁾

공원 조성 중에 사직단 공원내 운동장에서는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점차 공원으로서의 틀이 갖추어지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¹⁸⁾ 이후 경성부는 일반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쉬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며,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권역을 정비하는 사업을 벌였다. 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납량대(大納涼臺) 설치(1923년 7월), 공원 주위 도로 확장 및 연장(1924년 5월), 공원 내 산책로와 벤치 설치(1924년 11월), 개울의 호안 공사 및 벚꽃과 단풍나무 식수, 도로 일부 개수, 다리 설치, 테니스 코트 및 정자, 전등과 공중화장실 (1926년 2월) 등을 설치하였다.²⁰⁾ 그리고 경성부는 “봄철 경관을 좋게 하려는 것”이라며 공원에 벚나무를 심고, 1934년에는 공원내에 만주사변 전사자(戰死者), 경찰관, 순직자 등을 위한 충혼비들을 건립하여 일본의 영웅을 기리는 상징물을 만들었다.²¹⁾

사직단공원은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고 서울 주민들이 찾아와 즐기는 위락공간이 되었다. ‘부민위락 납량음악회’ 개최, 시내 각 학교의 운동회, 체육대

17) 「즉시 착수할 사직공원」, 『동아일보』, 1924. 11. 16; 「2공원 신 계획, 당분간 실현 불능」, 『동아일보』, 1924. 12. 28.

18) 「사직공원의 신설비」, 『동아일보』, 1922. 5. 5; 문화재청, 『사직단 복원정비 계획 용역』, 2014, 52쪽.

19) 1923년 5월 전매국 경성지국과 시내 각 출장소 직공은 1635명의 위안 운동회가 8일 개최되었다. 「삼천의 연초직공 사직공원에 운동회」, 『동아일보』, 1923. 5. 9; 「사직공원에 운동회」, 『동아일보』, 1923. 5. 9; 「휴가중 체육시설, 시내각공고교에서」, 『동아일보』, 1927. 7. 21.

20) 「사직공원에 대납량대 일간 공사 시작」, 『동아일보』, 1923. 7. 18; 「사직공원에 식영, 정구장도 2개소 설치」, 『동아일보』, 1926. 2. 13.

21) 「사직공원에 식영, 정구장도 2개소 설치」, 『동아일보』, 1926. 2. 13.

회 개최 및 위생 영화 등이 상영되면서 위락공간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었다.²²⁾ 1941년에는 아동 수영장이 만들어졌고, 정회(町會)사무소 및 빈민 구제 사업을 목적으로 인보관(隣保館)이 설립되었다.²³⁾

이와같이 경성부는 사직단공원을 조성하며 봄이 오면 벚꽃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름에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납량음악회’ 및 산책, 수영 등을 즐길 수 있는 위락공간으로 만들었다. 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각종 단체 등은 이곳을 체육대회, 야유회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사직단 권역의 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에 서울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공원 확대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남산, 장충단, 효창공원 등이 남촌 지역에 조성되므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요구하며 북촌 지역의 공원 조성 추진을 요청하기도 하였다.²⁴⁾

이와같이 일제시기 사직단은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축소, 혹은 파괴되고 있었다. 그러나 초기에 제기되었던 ‘사직단’의 축소 및 파괴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다. 오히려 공원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 공원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의견이 늘어났다. 즉 사직단의 ‘보존’ 및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졌다. 이것은 이미 사직단의 고유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제의행사를 위해 세워졌던 전시청, 악기고, 제기고 등의 건물들은 공원으로 바뀌면서

22) 「납량음악 일개월간 계속」, 『동아일보』 1926. 8. 12; 「휴가중 체육시설, 시내 각공보 교에서」, 『동아일보』, 1927. 7. 21; 1926년 이후 경성부는 부민위락을 내세워 사직공원을 비롯한 서울의 공원 등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납량 음악, 1개월간 계속」, 『동아일보』, 1926. 8. 12; 「시민위안 납량음악」, 『동아일보』, 1927. 8. 14; 「부민 납량음악회」, 『동아일보』, 1928. 8. 7; 「중앙위생조합연합, 위생영화 상영」, 『동아일보』, 1932. 4. 23.

23) 전봉희, 박일향, 「20세기 사직단 영역의 토지이용 변화와 역사적 제도주의적 해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0, 2014, 184쪽.

24) 「조선인과 무관계한 편벽된 여러 가지 시설, 누구를 위한 경성인가?」, 『동아일보』, 1924. 3. 24.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철거되어 사라졌다. 사직단 권역이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이곳은 서울 주민들에게 위락과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930년대 사직단 권역은 사직단 영역의 필지가 도로 개설, 필지 용도 변경, 문화재 지정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분할되는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1931년에는 사직단 북쪽 필지 일부가 도로로 전환되었으며, 1932년부터 1934년에는 일부 필지가 매동공립보통학교 부지로 전환되었다. 1938년 사직단의 고적 지정과 사직대문의 보물 지정에 따른 필지 분할도 있었다. 점차 사직단의 영역은 도로로 개설되거나 학교들이 들어서면서 축소되어갔다. 1940년 경성부는 시가지 계획을 실시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직공원을 ‘사직단 공원’이라고 지칭하였다.²⁵⁾ 그리고 사직단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직단 관리를 경성부가 직접 담당하였다. 단(壇)위에 돌기둥을 설치하여 울타리를 만들고 유는 초석만 남기고 담장과 홍살문을 철거하는 등 그 기본 원형은 변형되어가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권역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웠던 그리고 단 위에 함부로 올라가는 자를 엄격하게 처벌할 정도로 신성한 공간이었던 사직단은 누구나 단위에 올라가 구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또한 신실도, 관련 건물들도 철거되어 기단과 초석만 남게 되었다.²⁶⁾

제의공간에서 공원 안의 ‘고적(古跡)’으로 변화하면서 사직단은 점점 더 축소되었다. 제사 공간으로 다른 구역과의 경계를 확실히 담당하고 있었던 단유(壇墀)도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사적으로의 보존되어야 하는 것으로, 관람의 대상으로만 존재하게 되면서 사직단 및 사직공원은 제의공간이었다는 사실(史實)은 잊은 채, 일상의 피로를 푸는 휴식공간으로 변했다.

25) 「도시미관 금상첨화 140개 공원 신설」, 『동아일보』, 1940. 3. 13.

26) 한지명, 「일제강점기 사직단의 공간구성변화-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사직단공원 계획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53~54쪽.

그러면서 사직단은 특별 관리되던 신성하며 위계를 갖던 공간의 성격은 사라지고 현재적 필요에 의해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물 등이 설치되었다.

Ⅲ. 해방 이후 사직공원 내 다양한 건축물의 조성

해방 직후 “사직단은 단적(壇跡)만 보인다”, “간신히 남아있는 대문은 단청도 퇴색된 채 서 있다”, “사직공원은 거칠은 광장같다”는 지적이 빈번하게 제기될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다.²⁷⁾ 그러나 사직단 및 사직공원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공원을 찾은 사람들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각종 집회가 개최되면서 그 훼손은 점점 심해졌다.

해방 이후 사직공원에서는 일제시기에 진행되었던 각종 유형의 행사들이 유사한 형태로 개최되었다. 첫 번째 유형의 행사는 공원의 운동장을 이용하여 개최되는 웅변대회 및 집회였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1946년 1월 공원 안에 사무실이 있었던 웅변구락부가 개최한 ‘독립축성’을 주장하는 웅변대회 및 반탁투쟁결의대회였다.²⁸⁾ 두 번째는 임시 수용공간으로의 이용이었다. 일제시기 공원에는 전쟁에 대비하여 설치된 방공훈련소 및 인보관이 있었다. 해방 직후 이 시설들에는 전재민, 고아, 부랑아들을 수용하거나 수용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공원내에 가건물(假建物)들이 하나, 둘 세워지면서 공원 내에는 점차 전재민 수용소, 고아 수용소, 부랑아 수용소, 소년 수용소 등이 난립하였다.²⁹⁾ 세 번째는 시민위안연주회가 개최되는 ‘위안공

27) 「시내명소 순례: 사직공원」, 『동아일보』, 1957. 6. 27.

28) 웅변구락부는 1945년 11월 강제환이 사직공원 안에 창설하였다. 「웅변구락부 창설」, 『자유신문』, 1945. 11. 29; 「현상 웅변수상자」, 『동아일보』, 1946. 1. 9.

29) 「사직공원에 고아수용소」, 『경향신문』, 1947. 5. 6; 「사직공원에 부랑아수용소」, 『경향신문』, 1947. 10. 19; 「새소년수용소 사직공원내에 개설」, 『경향신문』, 1948.

간'으로의 활용이었다. 이 또한 일제시기 공원 내 영화상영, 여름철 납량음악회 등이 열렸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해방이 되었지만 일제에 의해 변형, 왜곡된 공간이라는 인식의 재고없이 공원은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각종 행사들이 '관성적'으로 개최되고 있었다.

1950년 서울시장 이기붕은 사직공원을 재정비, 개수하여 '수도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³⁰⁾ 그러나 서울시의 사직공원 재정비, 확대 계획은 6.25 전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전쟁 이후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에 휴식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1952년 서울시는 사직공원 권역을 구획정리 지역으로 결정하여 도시계획구역동가로(都市計劃區域洞街路)를 일부 변경하였다. 이 도시계획령의 결정에 의해 사직공원내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전재민의 주택재건과 제반 산업의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토지구획정리 지구, 공원, 녹지 풍치지역(風致地域)으로 규정하여 주택재건 설비작업 등을 규제하고자 하였다.³¹⁾ 이러한 조치는 전재민들이 공원 내에 더 이상 무허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재민들의 무허가 건물들의 난립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원 권역은 점차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공원으로서의 면모도 점점 약화 되었다.

1954년 서울시가 사직공원을 풍치지구로 정하였지만 공원 관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마치 암장(暗葬)의 공동묘지처럼 방치되고 있다"거나 또는 "공원이 불량배들의 아지트, 사주 또는 관상을 봐주는 가점포들이 늘어나" 주변 환경은 정비되지 않은 채 슬럼화되어가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자주 제기되었다.³²⁾ 시민들은 일주일 동안의 피곤을 풀 수 있는 공원이 없는데, 현존하는

1. 13.

30) 「이 시장의 새해 인사」, 『동아일보』, 1950. 1. 1.

31) 국무총리 비서실, 「도시계획구역내의 귀속재산 일부를 국유로 하는 건」, 1951, 관리번호:BA0135061(국가기록원)총무처 의정국 의사와 「도시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계획 결정 실시의 건」, 1952, 관리번호 BA0084188(국가기록원 소장).

공원조차도 방치되어 '사회악'의 소굴이 되었다며 서울시에 공원 정비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였다.³²⁾

당시 서울시는 도시계획에 의한 구획정리, 도로 확장, 수도 확장 등의 공사 때문에 공원 조성 및 재정비 사업을 당장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경찰 및 구청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원안에는 고아들을 위한 병원이 조성되었고, 단군성전이 건립되었다.³⁴⁾ 이와같이 사직공원 권역의 축소 및 각종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사직단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해방 직후 사직단의 훼손을 문화재의 역사성과 결부시켜 복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일제에 의해 사직단의 상징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 이것은 어떻게 회복 및 복원해야 좋은 가에 대한 이해는 크지 않았다.³⁵⁾ 이것은 일제의 근대 문명화 전략으로 조성된 공원이 한국인의 '근대적 삶'의 일부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한편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외양적인 면에서의 사직공원 및 사직단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는 사직단 대문, 훼손된 사직단 담장 등의 유지, 보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정부의 국보·고적 보존비의 소액 책정으로 보수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있었다.³⁶⁾ 오히려 사직공원 내 난립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등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존치되어 공간은 '슬럼화'되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된 '사회악'의 소굴이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1960년대 사직단은 '버림받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황폐해졌다. 이 시기 사직단은 어린이들이 칠책 안에 들어와 논다는 제보가 빈번하였으며, 사직단의 손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래의 기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32) 「대 서울 건설에 진공지대」, 『경향신문』, 1954. 5. 24.

33) 「대 서울 건설에 진공지대」, 『경향신문』, 1954. 5. 24.

34) 「서울에 고아병원」, 『동아일보』, 1956. 2. 11.

35) 「 시내명소 순례: 사직공원」, 『동아일보』, 1957. 6. 27.

36) 「문화재보호에 맹점」, 『동아일보』, 1957. 11. 25.

... 현재 사직공원의 정문처럼 서 있는 문사(門舍)는 국보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 문사에는 선거때 문에다 입후보자들의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져 있는가 하면 심지어 각종 광고물까지 못 박힐 때가 있어 국보의 존엄성이 전혀 상실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철책을 사방에 쳐놓은 사직단 안은 풀이 무성한 채 어린이들이 들어가 놀고 있으며 사직단의 유일한 흔적인 돌바닥 위에 앉아서 놀고 있어 차츰 손상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³⁷⁾

사직단의 훼손이 심각해져 가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보호 시책의 실시를 바라는 한편 문에 칠을 하고 사직단 안의 풀을 깎는 것은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이것 역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오히려 서울시의 공원 관리 소홀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지적과 서울시의 정비 약속이 진전없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기만 하고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직공원 및 사직단에 대해 전통문화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표명하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62년 문화재에호기간을 지정하던 때부터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교부 문화재위원회는 386점의 보물을 지정하였다.³⁸⁾ 이 중 사직단 정문이 보물 177호로 지정되었고, 이 시기 사직단 주위에 철책을 가설하는 등 '문화재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었다.³⁹⁾

그러나 1964년 사직공원 권역과 관련하여 민간에게 공원부지의 일부가 불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이 불하사건은 국회에서 관련 부서들에게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등 공원이 얼마나 방치되고 훼손되었는지, 심지어 투기

37) 「손질 안되어 갈수록 황폐 버림받은 사직단」, 『동아일보』, 1960. 8. 8.

38) 문화재위원들은 당시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문교부의 문화재 관련 사업, 정책의 자문 역할을 하였다.

39) 「제2급 국보 386점」, 『경향신문』, 1963. 1. 18.

의 대상지로 전략하였는지 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당시 신민당 소속의 박한상 국회의원은 사직공원을 “서울시민의 보건, 휴양에 중요한 풍치지구 일 뿐 아니라 황학정이나 사직단의 옛 모습을 지니고 있어 조선 한양의 역사를 담고 있는” 조선 5백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며 그 역사적 가치와 민족문화의 유산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공원의 일부 지역을 민간에게 불하하고, 산림채별권이 허가되어 실행된 것에 대해 농림부, 문교부, 법무부, 재무부 등 관련 부처들을 상대로 진상을 밝힐 것과 그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였다.⁴⁰⁾

‘사직공원 불하사건’에 대해 당시 신문들도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재무부가 사직공원의 용지를 개인에게 매매한 정황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 황학정을 포함 사직단 주위의 대지를 ‘고물’ 처분하듯 헐가에 방매해 버렸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을 가하였다. 즉 사직공원의 29,000평을 개인은 도합 299만여원 아주 적은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보도되었다. 그리고 사직공원의 일부는 두 번에 나누어 거래가 되었으며 은행으로부터 1,200만원을 융자하여 큰 폭리를 남겼다는 사실도 밝혀지면서 사직단이 일개인에게 거래 되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은 서울시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다.⁴¹⁾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는 사직단에 맞붙은 땅을 헐가로 개인에게 방매해 버렸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이나 국민의 이름으로 도저히 눈감아 넘길 수 없는 ‘관의 독선적’ 횡포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신문은 “해방 이후 역대 위정자들이 국유지, 사유지 또는 귀속재산 등을 팔아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40) 국회사무처, 『국회 회의록』 제 41회 국회본회의 회의록-공원용지 불하에 관한 질문, 1964, 8~10쪽.

41)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4. 4. 6.

권력남용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사직공원 둘레의 녹림도 팔아버려 공원은 일제시기 이래 위정자들인 사객(使客)들의 ‘유기장’이 되어버렸다”는 내용을 폭로하였다. 나아가 사직공원을 둘러싼 부정부패,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들은 담당자들을 대기 발령하거나, 불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하는 선에서 일단락하였다.⁴²⁾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사직공원은 다시 한번 ‘공원’으로서의 의미가 재부각되었다. 서울 시민들은 사직공원이 서울 북쪽 지역민의 보건, 휴양, 위락 등을 위한 풍치 지구이며 그리고 5백여 년의 사적을 간직한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뿐 아니라 문교부에도 그 관리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공원으로의 기능을 강조하는 여론과는 다르게 서울시는 1966년 “사직공원의 대지를 국회의사당 신축예정지로 확정하였다”는 보도를 발표하였다.⁴³⁾ 이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국회의사당 신축예정지를 사직단으로 확정하고 국회의사당건립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것이었다. 사직공원내에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겠다고 결정하게 된 큰 이유는 넓은 권역과 중앙청과의 근접성, 도로정비의 수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고적을 보존할 수 없고, 행정의 기능이 너무 집중되어 장기적 안목으로 서울시의 전체 도시계획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반대를 하였다. 반대 여론과 예산, 교통 문제 등으로 이 계획은 추진되지는 못하였다.⁴⁴⁾ 그러나 당시 사직단을 포함한 사직공원에 대해 서울시나

42) 국회사무처, 『국회 회의록』 제 41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공원용지 불하에 관한 질문, 1964. 11쪽.

43) 당시 서울시는 국회의사당 건립 예정지로 남산, 사직단, 종묘, 용산(삼각지), 말죽거리, 김포 가두 등 6개소를 후보지로 삼고 검토 끝에 사직단을 예정지로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44) 서울시는 의사당 건립과 관련 대지는 36,000평 이상은 확보해야 되는데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중앙청과 사직공원간의 도로정비가 쉬워 중앙청과 가까이 있어 서울시는 이 일대를 관아지구로 조성할 수 있는 이점 등이 있었다. 국회에서도 열 후보지

정부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해방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까지 사직공원 및 사직단을 둘러싼 정책 및 여론은 정확히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 공간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직공원 내에 각종 다양한 성격의 상징물들이 조성되고, 국회의사당 건립 등이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사직공원 또는 사직단의 사적에 대한 역사성의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사직단의 정체성 회복 및 복원에 대한 의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Ⅳ. 서울시 도시계획과 사직단을 둘러싼 ‘개발’과 ‘문화재 보호’ 담론의 충돌

1965년 서울시는 시정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주요 가로망 신설, 확장 공사 등 대규모의 토목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직단 및 사직공원은 새로운 국면에 봉착하였다.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이 추진한 대규모의 10개년 시정계획 사업에는 경복궁 담장, 광희문, 칠궁, 종묘, 사직단 등 다수의 문화재 철거 및 이전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토목사업 계획 중 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1967년 실시될 사직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사직 대문을 옮기는 것이었다. 사직터널 공사는 경복궁에서 신촌에 이르는 도로 개설이었다. 이때 도로를 직선으로 건설하기 위해 사직단 정문을 14m 뒤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두 번째는 조선호텔을 헐고 그 자리에 17층의 초현대식

중 사직공원을 의사당 신축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의사당 신축을 결정하며 그 규모는 지상 14층, 지하 1층의 ‘매머드’급 의사당을 구상하였다. 「14층의 새 국회의사당 사직공원에 세우기로」, 『동아일보』, 1966. 3. 14.

호텔을 조성하면서 원구단의 철거를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층의 호텔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1914년 설립된 조선호텔의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선호텔 철거계획은 인근의 원구단 철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궁정동 도로의 개설로 인한 육상궁(毓祥宮) 칠궁(七宮)의 이전 및 철거였다. 이것은 당시 계획하고 있었던 내자동과 궁정동 간의 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는 조선 역대 왕의 후궁들의 사당인 육상궁 및 칠궁 일부를 헐어야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의 최종 목표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서울을 현대도시 나아가 국제도시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여 현대적이면서도 교통이 발달한 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⁴⁵⁾

그러나 사직단 정문의 이축(移築), 원구단의 철거, 육상궁 및 칠궁의 일부 철거를 통한 도로 확장 계획이 발표되자 역사학계와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문화재 및 사적지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 찬반의 의견 대립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곳은 사업 주체였던 서울시였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을 반대하는 측의 주된 이유인 문화재 보존에 대해 ‘도시근대화’ 논리를 펴며 약간의 이전, 이축 또는 부분 철거는 가능하다고 개발을 정당화하였다. 서울시가 개발을 정당화하며 내세운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현재 최대의 당면과제는 ‘도시근대화’라는 것이었다. 우선 과제로 ‘근대화’, ‘개발’을 설정하고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 이익을 위해서는 문화재 철거 및 이전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문화재가 희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논리는 서울시의 일부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을 실시하면서 현재 문화재로 지명된 것들에 대한 역사성을 재고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문화재

45) 서울시 시정연구회, 「사직공원 조경미화 사업계획」, 『시정연구』 1969. 2호, 121~123쪽.

중 가치 없는 것들이 과대 평가되어 보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화재라고 하여 그리고 오래된 것이라고 무조건 가치가 있고, 보존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것은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와 그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었다.

문화재라고 하면 오래도록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고 싶은 것이 틀림없는 것이지만 그 보존 관리 방법은 그때그때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손상치 않는 범위와 방향에서 원위치를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생기므로 굳이 원형을 원 위치에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화재 보존과는 역행하는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나아가 문화재로서의 가치성이 떨어지는 것까지 문화재라고 하여 고루하게 과도한 평가를 하여 문화재에 대한 일반적 의식마저도 흐리게 할 수 있다.⁴⁶⁾

서울시는 문화재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며,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시의 주장은 문화재 보호와 도시의 근대화 중 어느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미래적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자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무조건 문화재라고 보호, 보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궁극적으로 서울시는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보다는 현재의 필요, 공공 이익의 중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었다. 나아가 서울시는 "도시근대화라는 각도에서 문화재를 바라본다면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한 보다 신축성있고 여유있는 사려가 요청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무조건 전통적인 편협한 사고방식에만 사로잡혀 처리해나가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지적하며, 개발을 반대하는 측에

46) 「도시근대화와 문화재」, 『경향신문』, 1967. 1. 25.

장기적 안목이 부족하고 역사적 가치가 ‘약한 것’임에도 오래된 것은 무조건 보존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를 ‘편협한 사고의 고집’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장기적 안목으로의 도시건설에서 문화재의 부분적 희생이나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개발’ 우선 담론을 제기하며 건설사업을 정당화하였던 것이다.

개발담론의 문화재에 대한 기본 인식은 ‘조국 근대화란 기치 아래 수도 재건 및 미래상의 투영’이라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인 것도 재고해야 된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시 부시장 차일석은 아래와 같이 문화재 보존에 대해 ‘현재라는 형적(形跡)’을 보여주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건설을 합리화하였다.

고도(古都)와 문화재를 보호하고, 후세에 전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고스란히 미래에 전해주는 방법, 또 하나는 가령 1960년대라는 시점을 통(通)했다는 형적(形跡)을 붙여서 전하는 방법이다. 우린 후자를 택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뒷날 선조(先祖)(1960년대)는 어떻게 손질했는가를 말해주자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건설을 통하여 문화재를 더욱 시민과 접근시키자는 것이다.⁴⁷⁾

당시 문교부의 문화재 관련 자문의 역할을 담당했던 문화재 위원들은 ‘서울의 문화재를 파괴하는 역사의 죄인으로 두고두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차일석 부시장은 “반면 잘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시민의 대다수가 우리의 안과 건설을 지지하고 있다. … 우린 누가 뭐래도 단행할 것이다…”라며 문화재나 고적으로 인하여 건설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다.⁴⁸⁾ 그리고

47) 「문화재는 누구의 것인가, 심각하게 맞선 시, 문화재 위에 묻는다」, 『경향신문』, 1967. 9. 27.

48) 「문화재는 누구의 것인가, 심각하게 맞선 시, 문화재 위에 묻는다」, 『경향신문』.

그는 “문화재 전문가나 그것을 애호하는 시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문화재 자체만을 갖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지엽적인 거다. 우린 그 주위의 정리, 도시생활과 전체적인 도시근대화라는 면을 총괄적으로 생각한다. 차원이 다르다”라며 문화재 보존을 주장하는 논리를 약간은 지엽적이며 근시안적인 것으로 치부하였다.⁴⁹⁾ 그리고 개발 및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재의 변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주장은 ‘문화재라고 지정된 것이 모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화재, 고적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실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치있는 문화재마저도 의미가 퇴색되므로 문화재에 대한 신축성있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시의 도시개발 추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제기한 측은 문화재 위원들이었다. 이들의 도시개발에 따른 문화재 및 사적의 이전이나 철거 반대 이유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일제시기의 계획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 당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기본 골격이 일제 조선총독부 및 경성부가 설계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와같은 문제 제기 안에는 식민유산 청산의식의 부재를 포함하고 있었다.

어쨌서 조선호텔을 헐어야 하는가. 새 호텔은 어쨌서 이 자리에 세워야만 하는가... 길은 곧은 것이 좋다. 그러나 역사적인 문화재까지 헐어버리면서

1967. 9. 27.

49)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은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그 속도가 생각처럼 나지는 못하였다. 1962년 제정 공포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것으로 중요한 문화재의 관리, 수리, 복구나 현장 변경 등을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법령이다. 그리고 이 법은 도시계획법보다 우위에 서는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곧을 필요는 없다. 조금 우회하면 그만이 아닌가. 30년 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집행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답변이다. 이것은 상식 이하 답변이다. 30년 전 서울의 도시계획을 만든 것이 누구인가. 일인들이 아닌가. 경복궁의 반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들의 침략 본산인 총독부를 지은 것이 그들이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을 조직적으로 파괴한 것이 그들이어늘 그들의 계획을 충실히 계승 실천하겠다는 그 두뇌가 상식 이상일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사직단의 경우도 이 역사적인 유적을 파괴해야만 되고 길을 우회시켜서는 안 될 이유는 어디 있는가. 어느 나라든지 가보라. 한 나라의 창시자가 국가의 상징으로 건설한 것을 파괴하고 길을 낸 예가 어디 있는가.⁵⁰⁾

문화재 위원들의 반대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것이 1936년 경성부의 경성 시가지 계획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었다.⁵¹⁾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기본 골격은 이미 '30년 전에 수립'된 것임을 밝힌 것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오늘날의 흔적을 거쳐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가 내세운 '현재라는 형적'을 남겨 미래에 보존한다는 논리에 대한 강한 반대였다. 당시 이화여대 박물관장이었던 진홍섭은 "문화재란 도시계획 이전에 존재하였던 것이며 도시건설을 하면서 고무한 건축물로 취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현시점을 거쳤다는 형적(形跡)을 붙여서 전하는 방법"이라는 용어는 웅색함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며 기본적으로 고(古)문화재는 그 원형이 보존되도록,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였다.⁵²⁾ 그리고 문화재 위원들은 역사 유적지에 대한

50) 「무정견한 파괴와 건설」, 『동아일보』, 1967. 1. 24.

51) 서울의 도시계획구역 결정은 1936년 조선총독부 고시 제180호로 '경성부도시계획 구역의 결정'고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연혁 2016』, 2016. 25쪽.

52) 진홍섭, 「도시계획에 쫓기는 문화재」, 『사상계』 181호, 1968. 5. 116~117쪽.

훼손 및 파괴에 대해 역사적 유적, 유물을 아끼는 이유는 “그것이 그대로 그 시대의 대변자요, 따라서 우리 민족이 더듬어온 이정표들이기 때문”이라는 역사성을 전제하며 개발 논리를 반박하였다.

역사유적, 문화재를 무시하며 추진되는 개발은 ‘전통 없는 문화, 전통 없는 민족’이나 하는 것이라며 개발론자들을 ‘야만인’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문화재를 무시하는 서울시의 몰역사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위원들은 특히 ‘국가 정신’의 상징이었던 사직단과 사직 정문의 이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전통의 파괴는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와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도시계획에 의거 철궁 및 사직단의 사적 철거 또는 이전(移轉)작업을 실행에 옮기려 하자 서울시와 문화재 위원 사이의 충돌은 더 심각해졌다. 당시 문화재 위원 이홍직, 김원룡은 도로가 약간 우회하더라도 옆으로 돌려야 하며 사직단의 경우 계획선에 저촉된다면 문을 원모습 그대로 옮겨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30년, 혹은 10년 전에 이미 제정 공포된 도시계획이므로 이를 수정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문화재 위원들과의 의견을 절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⁵³⁾ 서울시의 근대화 개발 논리에 입각한 사업의 추진에 대해 일부 여론은 도시계획의 ‘만용’ 또는 온고지신도 모르는 체 ‘근대화 열병’에 걸렸다고 비판을 가하며 서울시의 건설사업에 우호적이지 만은 않았다.⁵⁴⁾ 문화재 위원들은 1960년대 말 서울시의 문화재를 ‘파괴’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개발에 대해 반대여론을 형성해 나갔다.

53) 「도시계획에 험리게 될 철궁, 사직단 문화재 위원들 철거에 반대」, 『동아일보』, 1967. 1. 24.

54) 「김상기 교수, “큰일났다. 종묘벽도 허는 판”」, 『경향신문』, 1967. 9. 27.

1967년 문화재위원장 김상기는 서울시 개발에 대해 첫 번째로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서울시의 독단적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문화재는 역사적 유산으로 민족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역사유산은 일개인의 것이 아닌 서울시민, 전국민, 나아가 전 인류의 것으로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당국의 몰역사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글을 신문, 잡지에 기고하였다.

큰일났다. 이거 정말 큰일났다. 일찍이 이런 때가 없었다. 건설 중요하다. 그러나 선조가 물려준 우리의 영광, 문화재는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그제 지금 형편없이 위기에 놓여있다. 이대로 법이 유린되고 법이 위축한 우리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가 목살 된다면 이제 못해 먹겠다. 이렇게 도시계획이니 건설이니 하는 이름으로 역사의 생명이요, 민족의 영광인 문화재들을 무수히 파괴할 양이면 먼저 문화재보호법을 폐기하고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한 뒤에 하라

나아가 그는 구체적으로 개발로 인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 “개발의 논리에 눌러 기형적 형태가 된 사직단 정문의 실례”를 지적하였다.

사직단 정문은 우리가 사적 변형을 승인하지 않으니까 건물을 그렇게 보기 흉하게 고립시키고 후퇴시키지 않을 수 없게 밀어냈다...외국에선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신건물도 제한하고 도시계획을 거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다. 이걸 오늘날 세계의 상식이다.⁵⁵⁾

사직단 대문의 이축으로 사직단의 면모는 또다시 변형되었다. 사직단 대문은 굳게 닫혀 통로 역할도 못한 채 ‘자리’하게 되었고, 사직단은 문을

55)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7.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 옆으로 들어가는 이상한 구조의 공간이 되었다.⁵⁶⁾

근대화 개발과 함께 신설되는 도로와 이로 인한 역사유적의 훼손, 변형에 대한 비판적 소리는 문화재 위원을 넘어 언론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사직단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신설도로에 걸려 붙쌍 사납게 길가로 던져진 보물 제177호 사직단 정문”, “도시개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사직단”이라는 기사를 통해 사직단 변형을 비판하였다.⁵⁷⁾

그러나 ‘문화재 위기론’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유적을 무시하는 건설을 “문화재를 깔고 가는 도시계획”이라며 그 비판의 강도를 높이며 “도시의 현대화를 앞세운 서울시 당국의 처사는 도시건설이니 근대화니 하는 이름으로 민족의 빛나는 유산까지 말살하는 몰상식하고 성급한 의욕”이라며 문화재가 가지는 과거의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과 역사성을 강조하였다.⁵⁸⁾ 이와같이 팽팽하게 찬반 의견이 대립하거나 타협안들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개발 논리가 우세하였다.

사직단 공간의 변형이 진행되면서 건설을 단행한 서울시의 태도는 사직단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위상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당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직단의 역사적 위상이 낮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전근대사회의 국가의 상징이었던 종묘 사직의 사직은 국가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할만한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에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여러 유적지 중의 하나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6) 김서린, 김해경, 박미현, 「근대 사직공원의 형성과 변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4, 2014, 128쪽.

57) 「도시계획의 신설도로에 걸려 붙쌍 사납게 길가로 던져진 보물 제177호의 사직단 정문인 고 건축물」, 『경향신문』, 1967. 9. 27.

58) 「손보기 교수의 인터뷰 내용, 문화재 깔고 가는 도시계획」, 『동아일보』, 1968. 2. 1.

그러나 근대화 및 현대도시를 지향하며 추진하던 개발의 논리와 문화유적 보존을 둘러싼 대립의 차이는 단순히 개발과 보존의 논리만이 아닌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내재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개발의 논리에 의해 사직단 및 사직공원의 구조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 구조 변경은 사직단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선시대의 문화유적이지만 유형이 확실히 드러나는 건축물로서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사직단을 지켜내고자 하는 관리 주체도, 종묘나 궁처럼 구황실재산관리국이라는 주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조선의 정신적 이념을 따르는 그래서 조선시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였던 곳의 보존가치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록 중세시대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녔지만 일제시기 이후 1960년대까지 사직단을 ‘역사공간’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의 제고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과 건설의 담론에 밀려 쉽게 공간의 일부, 구조물이 변형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사직단은 전근대 시대 국가의 안위와 관련하여 신성하게 다루었던 공간이었으나 이 상징성은 일제 식민권력에 의해 공원이 조성되면서 변형,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일제시기 식민권력은 사직공원을 위락공간으로뿐 아니라 일본을 상징하는 벚나무의 조성과 일본을 위해 순직한 군인 및 경찰들의 충혼비를 건립하며 공간의 성격을 바꾸어갔다. 이러한 공간의 성격은 해방 이후에도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순직 군인 및 경찰 충혼비는 철거되었지만 일제시기 사직공원이 활용되던 방식은 그대로 이어졌다. 오히려 각종 상징물들이 조성되어 사직공원 안에는 복잡한 조형물들이 난립하고 있었다.

사직단 및 사직공원의 공간의 변화는 일제 식민시기뿐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일어났다. 해방과 전쟁으로 일제시기 왜곡되고 훼손된 사직단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특히 1960년대 서울시 도시계획 사업에 따라 사직터널 공사와 사직로를 확장하면서 사직 대문은 14m 후반으로 이축되면서 사직공원의 권역은 다시 한번 심하게 훼손되었다. 즉 사직 대문은 도로건설계획에 따라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운행을 위해 이전되면서 사직단으로 들어가는 '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사직단의 훼손 및 변형과 관련되어 '힘'을 갖고 있었던 논리는 공공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는 '부분적'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개발과 근대화 발원 담론이었다. 이러한 개발 논리에 반대한 것은 문화재보호 담론이었다. 이 논리는 개발을 내세워 역사유적 및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몰역사적이며 근대화 지상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같이 근대화 및 현대도시를 지향하며 추진하던 개발의 논리와 문화유적 보존을 둘러싼 대립의 차이는 단순히 개발과 보존의 논리만을 가진 것은 아닌 그 안에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이기도 하였다. 즉 사직단의 정체성 회복을 둘러싼 논의들은 큰 틀에서의 '민족' 담론과 '개발'담론의 대립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직단 및 사직공원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 가치성'과 '현재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

현재까지 사직단 및 사직공원은 일제시기에 왜곡된 정체성을 복원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사직단은 복원정비사업 계획에 의해 전시청 권역 복원 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인근 사직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정체성을 구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도 하다.

이와같이 사직단의 복원은 일제시기에 식민권력이 왜곡한 한국 전통문화 및 민족문화의 회복이라는 차원과 농업국가였던 전근대 사회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직단의 정체성을 복원하는 과정은 전근대사회의 정체

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립시켜 나가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백영, 「식민권력과 상징공간: 일제하 서울시내 광장의 형성과 활용」, 『사회와 역사』 90, 2011.
- 김백영, 『지배와 공간: 식민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 김서린, 김해경, 박미현, 「근대 사직공원의 형성과 변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 2014.
- 김수자, 「제1공화국 시기 장충단공원의 정체성의 변형 과정」, 『한국문화연구』 34호, 2018.
- 김수자, 「제1공화국 시기 창경원의 탈식민성의 불완전성과 공원 기능의 확대」, 『사림』, 2016.
- 김영상, 『서울 육백년, 창덕궁, 창경궁, 용봉기슭』, 대학당, 1994.
- 김현식, 최봉인, 성민호, 이정주, 『사직단 전사청권역 발굴조사 보고서』, 2016.
- 문화재청, 『사직단 복원 정비 계획』, 2014.
- 박윤희, 장성준,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과정의 상징정치 연구」, 『한국정치연구』 26-3, 2017.
- 서울시 시정연구회, 「사직공원 조경미화 사업계획」, 『시정연구』 1969. 2호.
-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 일지사, 1990.
- 염복규, 「식민지 권력의 도시개발과 전통적 상징공간의 훼손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 및 의미」, 『동방학지』 152, 2010.
- 염복규, 『일제하 경성도시계획의 구상과 실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예을, 『사직단, 이대로 좋은가- 사직단 복원과 활용을 위한 제안』, 2013.
- 이승일,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 평가- 조선총독부 도시계획 관련 공문 서군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2, 2005.
- 전봉희, 박일향, 「20세기 사직단 영역의 토지이용 변화와 역사적 제도주의적 해석」, 『대한건축학회』 30, 2014.
- 조경비평 봄, 『공원을 읽다: 도시공원을 바라보는 열두 가지 시선들』, 나무도시, 2010.
- 최병두, 「역사적 경관의 복원과 장소 정체성의 재구성」, 『공간과사회』 22-4,

2012.

하시모토 세리, 『한국 근대공원의 형성-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식민과 탈식민의 맥락』,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6.

한지명, 「일제강점기 사직단의 공간구성변화-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사직단공원 계획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홍순민, 「일제의 식민침탈과 경복궁 훼손-통치권력의 상징성 탈취」, 『문명연지』 5-1, 2004.

Abstract

THE MEANING OF CONFLICT OVER DEVELOPMENT AND THE
DISCOURSE O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SURROUNDING THE SAJIK DAN AND SAJIK PARK
CONSTRUCTION

KIM SOOJA (KIM, SOO JA)

Sajik's symbolism was undermined when the Sajik became a historical site without its "unique" role due to the abolition of Japanese rituals and the establishment of a park. Even after liberation, Sajik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historical spaces that did not find its identity

The most serious of the damages of the Sajik during the Japanese imperialism, besides suspending the functions of the Sajik, resulted in making the archetype and the altar, two stages almost impossible to find the original form, and changing the sacred ritual space into an amusement space by constructing a park. .

The archetype of the Sajik was left unchanged due to the sudden changes of the times, such as the Korean War, even after the defeat of Japan. In particular, in the 1960s, the central elements of the Sajik was further reduced or transformed by 'development' according to city planning. The Sajik Main Gate is representative. The Sajik Main Gate has reached the present time, losing its function as a "gate" due to the city planning.

The discussion of the identity of the Sajik and the Sajik Park is related to the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historical value' and 'presentity'.

The debates surrounding the recovery of the identity of the Sajik show the oppositional character of the "national" discourse and the "development" discourse in the larger framework.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useful topic to look at the past of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identity of the symbol space, which has been transformed and transform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iscussions on reinstatement of the Sajik show the conflict between the present and the discourse o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to liberation from the 1960s and 1970s.

In addition, the consideration of discourse surrounding the restoration and identity of the transformed spac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lso examines various perceptions of the post-colonial problem.

In addition, looking at the issue of identity recovery in relation to colonial liquidation, focusing on the discourse of 'national' and 'public', will not only provide an accurate recognition of the 'era' in which discourse is raised, but will also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future identity formation.

Key Words : Sajik, Sajik Park, Symbolic Space, Discourse on Development, Discourse o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